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대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률안 제·개정의 성과와 21대 입법 과제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배경

2020년 5월 29일로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¹⁾ 20대국회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신문을 장식했지만 20대 국회도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21대에 과제를 남겼다. 법률안의 처리 건수와 처리율로 20대 국회의 불성실함(?)을 질타하는 보도가 많았지만 처리율이라는 양적 지표로만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훨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일단 20대 국회의 발의건수는 그 이전인 제19대국회와 비교할 때 훨씬 많았고 처리건수 역시 더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얘기는 질적인 면이고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입법되었는지 그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의 해결, 그래서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리라고

본다.

사실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는 알려진 몇몇 나라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거꾸로 문제의식이 있다.²⁾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은 일사천리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러 번 논쟁하고 합의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입법과정은 쉽지 않다. 전자가 주로 용어의 개정이나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 행정적 방식의 변경 등의 법안이라면, 후자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면서 여러 정책적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법안들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후자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또 법안 의결의 성과로 쉬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번 검토되고 확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완성된 법률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도 크고 수범력도 높인다. 20대 국회에서 이처럼 사회 변화와 직결된 법안에 대한

1) 제20대 국회 기간은 2016.5.30.~ 2020. 5.29이고, 제21대 국회 기간은 2020. 5.30~2024.5.29. 이다.

2) 최근 연평균 법안 의결 건수는 미국 221.5건, 영국 36.4건, 프랑스 89.8건, 독일 137.5건, 일본 83.3건, 한국 2,122.8건, 입법조사처 자료, 2020.

펼쳐진 토론과 지난한 입법과정 끝에 타협으로 성과를 올린 법안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국회의 의정활동이 교섭단체간의 정쟁구도와 연동되어 운영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정당과 언론과 사회가 법안 발의 건수를 실적으로 보아온 잘못된 관행과도 연관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 국회에서 이러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안정화되고 그 속에서 입법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젠더 입법³⁾도 이러한 20대 국회 환경에서 성안되었고 또 여러 과제를 낳았다. 이 글에서는 여성과 가족관련 법률안 중 성평등 의제와 관련이 된다고 판단되는 주요 입법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비록 의결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제21대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임의로 선별하고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여 제시해 보았다.⁴⁾ 이 범주는 기본적으로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성과의 축적이 있었기에 분류될 수 있고 분류의 기준은 문헌이나 자료들을 참조하여 구분해 본 것이다.⁵⁾ 설정된 6개의 범주는 ① 여성폭력방지, ② 성평등한 경제와 노동, ③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④ 일·생활 균형과 다양한 가족, ⑤ 성평등한 연금·보상·복지 그리고 ⑥ 성 주류화 등이다.

II. 20대 국회 주요 젠더 입법⁶⁾

20대 국회 시기 젠더 입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한 미투 운동과 2019년 N번방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후 여성 안전 분야에 대한 입법적 관심이 두드러졌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영역이 새롭게 형성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의제도 서서히 부상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서 성별임금 현황의 공시와 공표 혹은 제출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 의제에 관련한 의미 있는 시작으로 보인다.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 그 동안 정책적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모성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관심이 다시 형성된 것도 고무적이며, 아이돌보미의 자격 강화나 양육비 이행관리의 강화에 대한 입법 성과도 언론의 관심과 시민 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밖에 이전 국회와 직접 비교해보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다양한 법률 위에서 젠더 의제가 교차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눈여겨 볼 특징 중 하나다.

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성폭력

① 재범방지 : 결격사유 및 취업·임용 제한

20대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방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입법이 이루어진 사안은 자

3) 이 글에서 젠더 입법이란 성불평등 현실의 개선과 관련된 입법을 의미한다. '여성 또는 가족' 관련처럼 단순히 대상 차원의 입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이 글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

5)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1948-2017, 제3편 입법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ender Equal Europe 2020-2025', EU; 낸시 프레이저 & 액셀 호네트, '분배나 인정이나, 사월의책, 2014.

6)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률 마다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격 취득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하거나 취업과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대학,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에 대하여 계속 확대해나갔다. 또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자의 경우 임용이나 임원의 결격 사유,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 또는 제적 사유에 새로이 포함하거나 기존 규정을 강화하였다.⁷⁾

② 가해자 제재 : 처벌 형량 강화, 공소시효 배제 등 형법 개정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7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강도강간미수범도 성폭력 범죄와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에 추가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또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였다.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사강간죄,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죄, 아동청소년 강간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도 추가하고,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하며,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일대일 보호 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범죄 신고 시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 신고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신고 의무자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성폭력 행위 등을 이유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희롱, 성폭력 등 폭행 예방을 위한 지침을 고시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이동수련 조치를 명하거나 지도 전문의의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행정적 조치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대표나 보육교직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하향조정 하도록 하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조치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률로는 이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경찰공무원법, 경제자유구역법,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한아프리카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등이 있다.

(2)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 중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가 의제화 되고, 법 개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벌금형을 삭제하여 형량을 강화하였으며 구입, 시청, 광고, 소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자의에 의해 스스로의 신체를 촬영했지만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딥페이크 등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려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 영상등의 정보 식별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행위, 불법촬영 및 반포 행위, 허위영상물(딥페이크)도 범죄 수익의 몰수 추정 대상인 중대범죄에 추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등의 범죄자도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3) 성매매·인신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였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채팅화면에 신고포상금 안내문을 추가하도록 하고 모바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도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건을 개정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그 사람을 수수, 은닉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⁸⁾

(4)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성희롱 발생 시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성희롱 예방을 추가하였다.

(5)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 퇴소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다. 또 가정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을 국가 책무에 추가하였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였다.

(6) 여성폭력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의 정

의를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외에 지속적 괴롭힘, 데이트 폭력, 디지털 폭력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화와 통계 구축,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지침의 마련과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의 교육 규정을 마련하였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에 장제비를 추가하였으며,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에 추가하며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하였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8) 나머지 법률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보상대상자 지원법,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2. 성평등한 경제와 노동

(1) 성평등 고용 노동

20대 국회에서는 성별임금격차, 양성평등한 임용, 그리고 노동시장 성차별 시정을 위한 몇 가지 입법적 진전이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참여시 임금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 법인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에 관해 조사, 공표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균형 임용을 위해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고, 3.8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또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임금의 날로 하고 이날에 성별임금통계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남녀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정하고 기관장이 목표 수립과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양성평등 임용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임용 계획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여 교원의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 및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 장관 등 소관 부처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⁹⁾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직자 기초심사자료에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여성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이 시정요청 사항의 이행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2)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의 사유에 혼인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와 시도, 시군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을 3차례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퇴직한지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완

9) 나머지 5건의 법률은 울산과학기술원법, 대부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10) 나머지 5건의 법률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이다.

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하였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다. 추가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재고용에서 고용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하였으며 적용대상을 동일 기업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확대, 완화에 왔다.

(3) 여성기업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 형평성을 맞추고,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3.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1) 동등 참여 촉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무효로 하였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산림복지진흥법을 개정하여 산림복지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위원회 설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여성 등 각 사회계층이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4. 일·생활 균형과 다양한 가족

(1) 일·생활균형과 가족친화기업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분할 휴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입양의 경우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하였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였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

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하였다.

(2) 아이돌봄·보육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며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각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였다.

한편,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광역센터를 지정하고, 아이돌봄비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경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도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며, 아이돌봄미자격정지 사유를 3년으로 연장하고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아이돌봄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하였다.

(3) 한부모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을 실시할 때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의 특례규정에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도 포함하였다. 또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하고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하며 미혼이 아닌 여성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자체가 미혼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자녀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소득 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다문화가족 등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교육부 장관 등은 교원에게 다문화이해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지원을 포함하였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의 정의 상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5. 성평등한 연금·보상·복지

(1) 연금 및 보상금의 분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속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법 등 4건을 개정하여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 인정 기준으로 하고 분할연금 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 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였으며,¹¹⁾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 2건을 개정하여 유족보상금 수령시 주 부양자 합의가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 균등 분할하도록 하였다.¹²⁾

(2) 모성 건강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하였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

별을 고려하고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의 용어를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6. 성 주류화 등

(1)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 의무부여를 명확히 하였다.

(2) 성별 고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및 배려의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기준을 정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3) 양/성평등정책 일반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행동계획의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가 동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11) 나머지 3건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다.

12) 나머지 1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공동연구와 학술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업무 위탁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III. 21대 젠더 입법 기대

성불평등 상태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여전히 완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상태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나름 미시적인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사건과 2018년의 미투 운동 그리고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SNS를 진지화하는 성평등 요구의 강렬함은 또하나의 물결이 되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젠더 각성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 오랜 시간 견고하게 남아 있는 가부장적 의식의 퍼즐이 흐트러지고 성평등 사회라는 새로운 판이 채워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낙관적인 순방향일지는 알 수 없다. 많은 논자들이 포스트 코비드 19(Post-Covid 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을 이야기한다. 기술기반 사회로의 완전 진입은 성불평등 문제에도 커다란 의제를 던진다. 남성과의 고용 격차 20% 문제와 34.6%에 달하는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논의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

편 디지털 기반 성범죄의 확산과 성범죄와 중대범죄와의 결합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 또한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그 피해의 범위와 속도는 짐작 이상이다. 의료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 수준은 여성의 삶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을 것이나 이 영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고 대중적 의제화가 되어 있지도 않다. 나아가 합계 출산율이 0.9에서 0.8로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곧 우리 사회가 20, 30대에게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가족을 꾸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간의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암시한다. 고용보험이 규격화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가족관계도 규격화된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닫힌(closed) 법과 제도로는 출생률 문제도 길을 찾지 못할 뿐 더러 소위 '법적 가족' 이외에 존재하는 가족들이 늘어날 뿐이며 여성들의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는 우리 사회에서 개념조차 모호하다. 국가가 20대와 30대의 삶의 현실을 기준으로 놓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개방적(opened) 법과 제도를 재설계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제21대국회의 젠더 입법은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모든 입법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지난 국회의 연장선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과제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 안전 의제에 관하여

'길거리 묻지마 폭력'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은 성평등의 제1조건이다. 20

대국회에서 과제로 남긴 비동의강간죄 규정 신설, 온라인 그루밍 조항 신설 등 디지털성범죄 입법 강화, 성범죄 의사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포함 등 의료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정비 그리고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근거 규정 마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매체들을 모니터링하여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규제들을 만들어나가는 노력 또한 기술발전의 속도만큼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성평등한 경제와 노동 의제에 관하여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의 해소는 1987년부터 입법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2020년 현재의 남녀고용격차와 성별임금격차 수준을 상기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유명무실한 듯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와 일·가정양립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하는 사업에 더 전념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에만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성별임금 현황 보고를 넘어 더 전향적인 성별임금격차 축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넘어서서 여성경력단절의 예방과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여성일자리 전반의 흐름에 대한 주도적 인식과 대책 마련에 중심축을 세워나가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의제에 관하여

제21대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로 20

대국회 보다 2% 증가했으나 2020년 5월, IPU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189개국 중 117위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고려하면 선거제도는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방향으로 설계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할당을 조기에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비여성정치인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가장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선출직 남녀동등 참여 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공직 참여와 함께 입법, 사법, 행정의 운영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성별로 균형 있는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여는 단지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롤 모델, 업무 경험을 통한 역량제고, 네트워크 확대가 확대될 수 있고, 낸시 프레이저의 통찰처럼 참여 그 자체가 존재의 사회적 인정과 형평성 있는 분배와 불가분리하다. 정부 위원회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민간기업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의 건강권 및 재생산권 의제에 관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 사안은 세부적인 조항들을 신설해나감에 있어 논의의 방향이 중요한데 기존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적 관점이 아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관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인지 의학의 접근처럼 여성 건강에 실효적인 의학과 보건의료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으며,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치열했던 여성 안전 논쟁이 난임 지원 정책으로 대체된 이후 시야에서 멀어졌던 생명기술의 전개를

다시 한 번 성인지 관점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덧

많은 SF 영화가 상상하듯 미래의 모습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기술의 문제일지도 모르며 어쩌면 인간 대 사이보그 문제로 나타날지 모른다. 지나친 상상인지는 모르나 만약 미래의 전

선이 인간 대 비인간으로 전환되어 버린다면..... 성불평등 문제는 정말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유발 하라리의 지적처럼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합쳐지면서 인류가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그래서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자유에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젠더 입법은 그래서 역으로 더 가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얘기처럼 미래는 오늘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낸시 프레이저 & 액셀 호네프, 「분배나 인정이나?」(2014), 김원식·문성훈 역, 「사월의 책」
 유발 하라리(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역
 한국여성의정(2020), 「젠더입법 가이드 북」
 한국여성의정(2018),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1948-2017」 제3편 입법편
 대한민국 정부(2019.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20.6), 「21대 국회 정책현안자료집」
 EU(2020), 「Gender Equal Europe 2020-2025」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20),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22호~제25호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2016 5.30 ~ 2020 5.20 탑재 자료 참조